

18대 국회 '정상 개원' 무산

쇠고기 대치...출발부터 '삐거덕'

야 3당 "재협상 때까지 개원 무기 연기" 한 "단독 개원은 않겠지만..." 등원 촉구

쇠고기 재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18대 국회의 정상적인 개원이 무산됐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4일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고 한나라당은 야당 없는 단독개원은 않겠다는 입장...

있는 상황에서 국회 개원은 국민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미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개원을 무기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3당 원내대표들은 또한, "정부는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자유규제협정'이란 것을 맺어달라고 애걸하고 있는데 이는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을 모욕하는 짓"이라며 내각총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협상을 선언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 변화가 없는 한, 국회는 정상화될 수 없으며 그렇게 문을 연 국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야당이 요구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수용에 이어 '쇠고기 여야 방미단' 및 국회 쇠고기 대책 특위 구성 등을 거듭 제안하면서 야당이 등원을 끝내 거부할 경우 단독 등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내일 등원한다"며 "오늘 299명의 의원에게 등원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개원식 당일 '단독 등원' 방침은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무기한 개원 연기' 입장을 밝힌 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야3당, 개원 연기 공조 야 3당 원내대표 등 지도부들이 4일 국회에서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국회 개원을 무기한 연기를 기다리며 손을 잡고 공조를 다지고 있다. 왼쪽부터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 권선택, 민주당 원혜영, 민주당 김기갑 원내대표,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 민노당 박승훈 대변인.

李 대통령 "경제 불가항력적 상황"

국가 유공자·유족 초청 오찬

"전사한 국군 유해 끝까지 찾을 것"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우리가 1~2년 정도 뒤에 (경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면 세계 경제가 좋아졌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 유공자와 유족 23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하지만 석유값과 원자재값, 식량 가격이 경증 뛰어들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걱정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비축량) 일본은 15%, 미국은 25% 정도 되나 우리는 4% 정도인데다 일본은 모든 산업구조를 석유를 절감하는 형태로 바꿨지만 우리는 아무런

준비없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이나 앞으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향후 5년간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와 관련, "일본을 방문했을 때 굳이 과거는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일본이 이제는 스스로 피해국에 대해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였다"면서 "일본이 가해자로서 피해국에 스스로 사과하는 것을 바라지 우리가 '사과하라', '사과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사과는 백번 들어봐야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

에서 "보훈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저는 실천으로 사랑과 존경의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6·25 당시 전사한 국군유해를 찾는 작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몇십년이 지나도 대한민국을 위해 몸을 던진 애국자들의 유해를 찾는 일에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연세가 많고 생사확인도 할 수 없는 국군포도물에 대해 북한도 인도주의적 처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는 애국을 말로 하는 사람은 많지만 행동과 몸을 던져 실천하는 애국자는 많지 않다"면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위기가 닥칠 때마다 늘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면서 보훈가족들을 격려했다. /연합뉴스

이번에도 개원 '위법' 되풀이 되나

지난달 30일로 4년 임기를 시작한 18대 국회가 사실상 법적 시한에 맞춰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회법 제5조는 '총선 이후 최초의 임기는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5일에는 개원식을 열어 18대 국회의 시작을 국민에게 알리야 한다. 개원식은 국회의장단 선출과 대통령의 국회 연설로 이뤄지지만 쇠고기 해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개원 자체가 미뤄질 공산이 크다. 5일 개원식이 못 열리면 법을 만드는 입법부 스스로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개원이 이뤄지면 대통령 연설도 연기된다. 국회법 41조는 각 상임위원장을 총선 직후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표하고 있다. 5일 개원을 한 뒤 오는 7일에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해 원구성

마무리 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당이 쇠고기 전면 재협상 선언때까지 국회 등원 거부 입장을 밝혀 원구성 협상은 물론 원구성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국회의원 임기개시 후 7일 이내에 개원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이같은 규정이 처음 적용된 1996년 15대 국회 단 한번이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DJ "쓴약 먹이듯 밀어붙이면 美도 손해"

김대중 전 대통령(DJ)은 4일 쇠고기 협상 파문과 관련, "미국 입장에서 쓴 약 먹이듯 밀어붙이면 손해"라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인 인사차 예방한 통합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을 맞은 자리에서 "한국 사람들이 불안하다고 뉴질랜드, 호주산 사먹으면 미국도 손해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쇠고기를 사먹는 손님이고 미국은 장사하는 사람"이라며 "미국 속담에 '소비자가 왕'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파는 측에서 불안

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쇠고기 문제는 외교 문제도, 안보 문제도, 경제적 이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일반 대중이 아침 저녁 상에 오르는 쇠고기를 안전하게 먹고 싶으니 그걸 보장해 달라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李 대통령, 9일 '국민과의 대화' 연기

이명박 대통령은 9일로 예정됐던 '국민과의 대화'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이종관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초 국민과의 대화를 취미 100일인 3일로 잡았다가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밝히고 이해를 구한 뒤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9일로 연기했던 것"이라며 "현재 야당이 쇠고기 재협상 선언 때까지 등원 거부 방침을 정해 국회 개원이

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민과의 대화를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그러나 "현재 미국과 추가 협의 중인 쇠고기 문제가 민간 업자들의 자율규제로 가닥이 잡힌 만큼 원만한 해결되는 대로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과의 대화를 재차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곽내영교육학'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eyoung University (곽내영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Seinedu' (세인교육) featuring a laptop icon and text about online education and career train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Naeyoung Education' (곽내영교육학) featuring a large '공인중개사' (Public Broker)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Naeyoung University (곽내영고시학원).

Advertisement for 'MDGOSI' (무등고시피킹인) featuring a large '공무원' (Civil Servant)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for MDGOSI.